

경영난 고통 소상공인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날벼락’

휠체어 이용 가능·시청각 기능 장착한 장애인 편의 키오스크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 설치 의무화... 대부분 “시행 몰라” 기존 키오스크보다 가격 3배 비싸... 불황 장기화에 부담 가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 Free Kiosk) 도입이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 별칭인 기존 기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지역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존 키오스크를 변경하는데 추가로 돈을 지출하는게 부담이 된 상황에서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50㎡(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롭게 문을 여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의 경우 2026년 1월 28일까지는 교체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와 높아 형태 등은 비슷하지만 화면 하단에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자세 주문, 음성인식 주문, 휴대폰 미러링 등의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다.

문제는 다수 업주들이 의무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5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13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갑작스럽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신준용(39)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정책에 대해 ‘금지조문’이라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신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대를 구입, 1대를 렌탈해 총 2대를 매장에 설치했다. 신씨는 “취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좋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긴 했는지 의문이다”면서 “키오스크는 애초에 고가의 기기라 함부로 들일 수도 없고 프로그램 세팅을 다시 해야 해서 교체 문제도 까다롭다”고 고

개를 저었다.

기존 키오스크는 100~2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300~500만원으로 최대 5배까지 비싸다.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2개 업체에 불과해 선택지도 많지 않다.

기존에 사용하던 키오스크와 프로그램이 달라 매출과 메뉴 관리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업주들의 애로사항이다.

봉선동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 중인 이윤서(여·40)씨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어 이번 정책에 더 마음이 쓰인다.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강제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애초에 키오스크는 매장에 가야 사용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동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면 당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비장애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윤도하(39)씨는 오는 5월 폐업을 앞두고 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생업을 이어왔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윤씨는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며 “장애인 생활권의 가계도 아니고, 키오스크 외 계산대 결제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설치를 강제하는 건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시 70%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주 자부담은 필수적이다. 2024년 이전에 스마트 상점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키오스크 업체 관계자들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키오스크 전문 업체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후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될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업주들은 비싼 돈 주고 구입하느니 키오스크를 없애고 인건비를 들이겠다는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악화된 경기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되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글·사진=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금남로 곳곳 위험천만 포트홀 13일 광주 동구 금남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에 물이 고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오경미)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상고심을 원심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A씨의 범행은 가중처벌 대상인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 전 A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A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병노 담양군수 대법서 당선 무효형 확정

항소심 선고 벌금 500만원 유지

선거구민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대법관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식사를 제공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

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대납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일 뿐이고, 이는 선거 관련이 아닌 당내 경선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제공 등의 상대방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성이 없다.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기부행위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담양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병호 기자 jusbh@

‘양복 뇌물 혐의’ 이상의 함평군수 1심 무죄

건설업자에게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의 함평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주)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해입을 맞춘 양복 5벌 비용(888만원 상당)을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재판에서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지난 뒤 수의계약을 파내지 못한 A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시작됐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잘못하지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